



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인권

국제사회의 동향과 북한의 대응

이금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수암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CONTENTS

제3권 2호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의 동향과
북한의 대응

인 쇄 2009년 2월

발 행 2009년 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스) 901-254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디자인·인쇄 NEULPUM* (주) 뉴폼플러스

전화 070-7090-1177

〈비매품〉



| 국제사회 동향

- 1. 개별국가 3
- 2. 유엔과 국제협력 8
- 3. NGO 10
- 4. 분석 및 평가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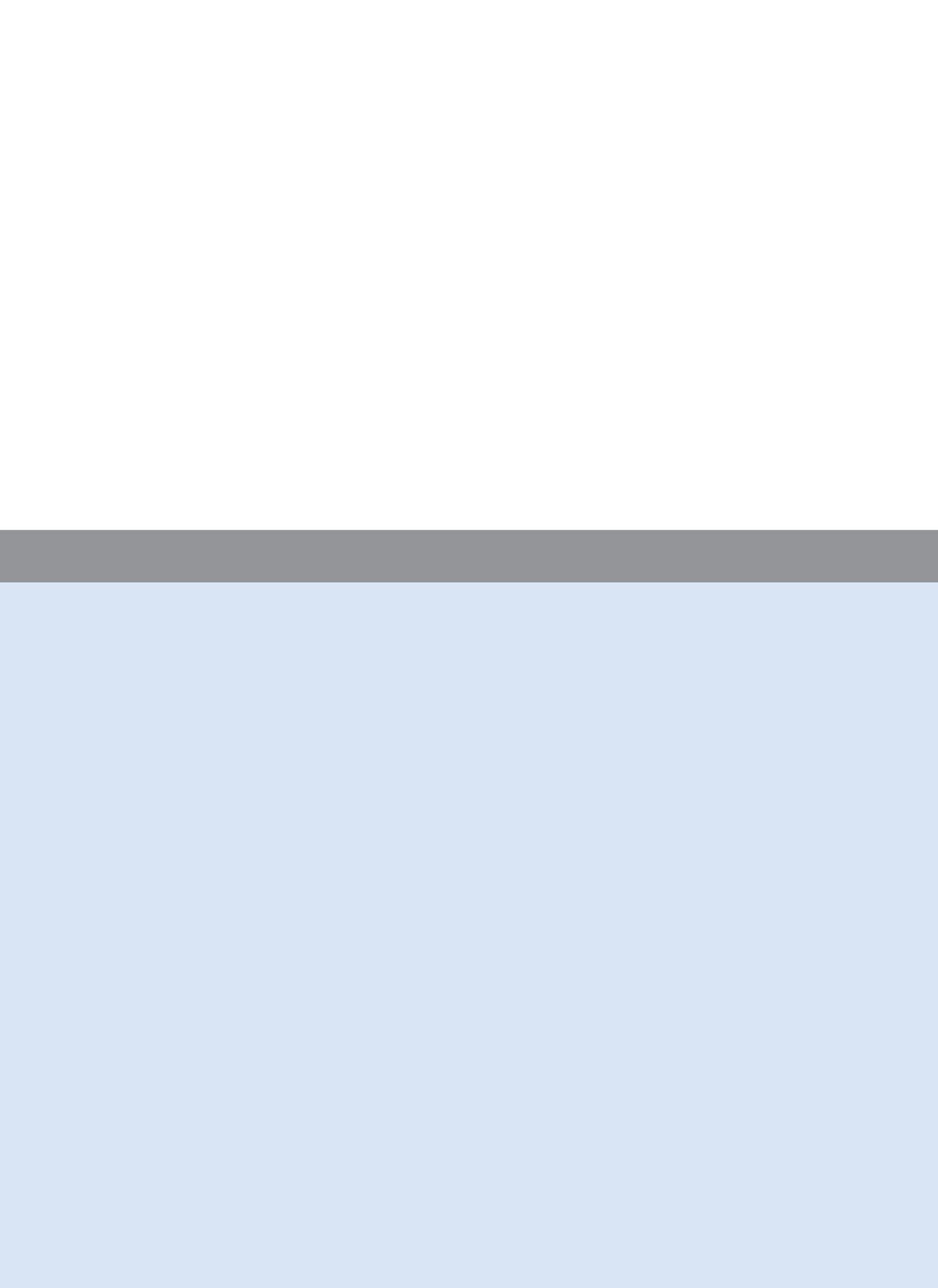
| 북한의 대응

- 1. 미국에 대한 반응 19
- 2. 일본에 대한 반응 22
- 3. 유엔에 대한 반응 28
- 4. 남한에 대한 반응 30
- 5. 분석 및 평가 40



| 인도주의 사안

- 1. 탈북자 45
- 2. 납북자 · 국군포로 54
- 3. 이산가족 60
- 4. 분석 및 평가 64





1. 개별국가	3
2. 유엔과 국제협력	8
3. NGO	10
4. 분석 및 평가	13

1. 개별국가

가. 미국

미국, 러시아 벌목공출신 탈북자 망명 허용(7.23)

- 2004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미국은 러시아에 있던 탈북자의 망명 허용
 -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해 탈북자의 난민 인정과 미국 망명을 불허
 - 시베리아 벌목공 출신의 한동만(42)씨는 1993년 벌목공으로 러시아에 간 후 1998년 북한의 통제에서 벗어난 이후 2007년 유엔으로부터 난민 지위획득

북한, 레프코위츠 미국인권특사 방북 거부(8.7)

- 통일부 대변인은 “레프코위츠 특사 등 일행 6-7명이 개성공단 방문을 희망해 와 지난달 28일 북측에 초청장 발급을 신청했다”고 발표
 - “북측이 (이들의) 개성공단 방문이 적합치 않다는 이유로 방문신청서 접수를 거절했다”고 발표

레프코위츠, 북미관계와 인권문제 언급(RFA, 8.18)

-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달려있다고 강조
 - 이러한 원칙은 다음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
 - 가을에 다시 개성 공단을 방문할 계획이며 북한 근로자들과 직접 면담하겠다고 표명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북한종교 관련 보고서 발표

- 탈북자 72명을 대상으로 종교자유 문제를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창살 없는 감옥-북한의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탈북자 증언(A Prison Without Bars: Refugee and Defector Testimonies of Severe Violations of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in North Korea)’ 제목의 보고서 발표

- 2005년 발표한 ‘어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 - 북한 내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탄압 중대사례 증언록’ 제목의 보고서 증보판 발행

미국,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4년 만에 탈북자에 첫 영주권 부여(9.15)

-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귀화국은 2006년 5월 두리하나 선교원의 주선으로 태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이주한 탈북자 6명 가운데 김미자씨(가명·여·30대 후반)에게 영주권을 발부키로 결정

미국 의회,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처리(9.24)

-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의 효력을 4년 더 연장하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통과
 - 북한인권특사를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꿔 업무의 효율성 제고
 -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의 신원조회 등 수속기간을 단축해 더 많은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돕고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아시아 각국의 대사나 미국 고위 관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 탈북자들의 진로와 재정착을 위해 한국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 부시 대통령은 북한인권특사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 북한인권재승인법안 서명(10.7)

미국 국무부, 북한 종교탄압 ‘특별관심국’ 지정(9.20)

- 국무부는 ‘2008 국제 종교자유보고서’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포함한 8개국을 종교탄압국으로 재지정
 - 북한은 지난 2001년 이래 8년째 종교탄압국에 지정
 -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에 대해 “북한 헌법은 ‘종교적 믿음’의 자유를 허용 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종교적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

미국 국무부, 6자회담에 북한인권특사 참석 의사 표명(10.5)

- 미국 국무부가 앞으로 6자회담과 북·미 양자회담에서 북한인권특사를 참석시켜 북한 인권문제와 탈북자 문제를 제기토록 하겠다고 표명
 - 국무부의 매튜 레이놀즈 의회담당 차관보 대행이 상원의 샘 브라운백 의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국무부는 북한재승인법안에 따라 대사로 승격된 북한인권특사가 6자회담 전체회의, 양자실무회의, 그리고 관련 회담 및 회동을 포함한 모든 공식 회의에 참석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말하도록 할 것”이라고 표명

나. 유럽연합과 기타 국가

영국, 탈북자 지문정보 요청(7.19)

- 영국 정부는 2007년 하반기 난민자격을 신청한 탈북자들의 한국 국적 先취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난민 신청 때 찍은 지문과 한국 정부의 지문 정보를 대조해 달라”며 우리 정부에 지문 확인 요청
 - 개인정보 제공의 법률 위반 및 인권침해 여부 관련 정부관련 부처 간 검토를 거쳐서,
 - 영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 가운데 지문 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한국 국적여부를 확인해 줄 것으로 알려짐.
 - 영국 정부는 망명신청자들 중 지문조회 결과 이미 한국에 정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추방할 방침(7.25)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서 보호받던 탈북자 5명, 미국행을 위해 체코 프라하에 체류(RFA, 7.30)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서 보호받던 탈북자 5명(남성 3명, 여성 2명)은 북송될 위험에 처했지만, UNHCR의 긴급지원 요청을 받은 체코 정부가 ‘일시 체류’를 허용함에 따라 중국에서 비행기편으로 7월 27일 프라하에 도착
 - 체코 정부는 최초로 중국내 탈북자들에게 제3국 망명을 위한 ‘일시 체류’ 허용

일본, 북한인권침해문제 계몽주간 행사 개최(12.10-16)

- 일본은 ‘납치문제 기타 북조선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의 납치문제 등 북한에 의한 인권침해를 생각하는 국제회의 등 북한인권주간 행사 개최

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노력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권고(8.5)

-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국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 할 것을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권고

한·미 정상회담, 북한 인권 진전 합의(8.6)

- 양 정상은 공동성명문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면서도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힘.
 - 한미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이 향후 북미 관계에서의 중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한나라당, ‘북한 인권개선소위’ 설치(8.14)

- 한나라당은 당 인권위원회 산하에 ‘북한 인권개선소위’를 신설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다루기로 결정
 - 이산가족, 탈북자, 국군포로, 납북자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외 인권단체를 포함한 비정부기구(NGO) 등과의 교류를 통해 북한 인권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

국가인권위원회, 월선 북한 주민 조사·처리 문제점 지적(8.19)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2월 서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탄 채 표류해 남쪽으로 온 북한 주민 22명의 복송 조치와 관련,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에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
 - 국가정보원장에게 월선 북한주민 조사과정에서 인권 보장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언론공개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
 - 통일부장관에게 복송되는 북한주민의 신변안전 보장 및 생사 확인을 위한 공식적인 채널을 마련할 것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구성(9.23)

-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9차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3-5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는 북한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
 - 북한인권 관련 안건을 검토하고 의견을 전원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 수행
 -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관련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는 '북한 인권특별위원회' 를 구성(11.14)

국가인권위원회, 인도적 식량지원 관련 권고(9.30)

-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식량지원을 정치적 사안과 분리해 추진할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권고하기로 결정
 - 분배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내외적인 우려와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한 가능한 조치도 강구할 것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 개최(10.29)

-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북한인권 인식과 과제' 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 개최

한국정부, 제63회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11.4)

- 외교통상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 다른 사안과 분리해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EU 등이 주도해 합의한 결의안에 대해 우리 정부도 뜻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발표

홍일표의원, '북한인권재단 설립 법안' 발의(11.11)

-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분석, 전략과 정책개발,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

2. 유엔과 국제협력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 식량난으로 인한 인권상황 악화 언급 (VOA, 10.9)

-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에 주목했다”며 “설사병을 앓는 북한 어린이들의 수가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가하는 등 식량난으로 어린이, 산모, 수유모, 노인 등 취약계층이 고통당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표명
 - 보고관은 북한이 아직 자신의 방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나 “북한과 건설적으로 교류할 의향이 많다”고 언급
 - “북한에 직접 가게 되면 북한쪽 입장도 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에 이득일 것”이라고 설명
 - “북한이 식량분배와 관련해 유엔 기구에 잘 협조하고 있고, 유엔 기구들이 과거보다 많은 지역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
 - 그러나 “전반적인 북한 인권 상황은 여전히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인권 상황이 개선되도록 국제적인 차원에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

문타폰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 탈북자 처벌·공개처형 중단 촉구(10.23)

- 유엔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단기 개선안으로 공개처형 금지와 개인 신상에 대한 침해 금지, 해외에서 강제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 금지,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에 대한 접근 허용 강화 및 유엔과 다른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적극적 협조, 외국인 특히 일본인 피랍자에 대한 해명,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등을 제시
 - 장기적 안목에서 교도소 개선과 사법체계 강화 등을 통한 사법체계 현대화, 농업 개선을 통한 식량 확보 등을 촉구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 개최(10.25)

-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 참석한 각국 의원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권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의견 개진
 - 미국, 일본, 몽골, 스리랑카, 태국을 포함한 15개국에서 30여 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인권단체 대표 등이 참석

- 다이앤 왓슨 미 하원의원은 “미 의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주민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대우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표명
- 에드워드 로이스 의원도 “북한 정권이 올바르게 국민들을 대우한다면 인권문제는 그들에게 더 이상 전략적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존 그로진 영국 하원의원은 “중국 내에서 탈북자들에게 가해지는 인신매매와 착취에 대해, 우리는 중국이 북한과 주민상호인도 협정을 맺음으로써 국제적 인권 보호 원칙을 위배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지적
- ‘북한 자유 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은 이번 5차 총회부터 공로상을 신설, 조선일보의 ‘천국의 국경을 넘다’ 특별취재팀을 첫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
- 총회는 해외 체류 북한자유이주민 현황과 대책, 유럽지역의 탈북자 난민현황, 북한 내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피랍 일본인 문제와 구출운동, 동남아 난민문제 등을 주요의제로 논의할 계획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성명서 발표(10.31)

- 비릿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6가지 제안을 담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 당국이 국제인권 조약에 명시된 의무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승인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표명
 - 이산가족, 실종자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국제법에 근거한 남북간 건설적 대화
 - 모니터링을 전제로 한 각국의 대북 식량, 의료, 비료 원조
 - 자연재해, 식량관련 피해 방지와 대비를 위한 대책 강구
 - 난민신분을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 북한인권 분야 관계자들의 2009년 북한 정례인권보고(UPR) 참여 등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11.22)

- 북한내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찬성 95표, 반대 24표, 기권 62표)
 - 북한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활동 협조, 인도적 기구의 접근 허용,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촉구
 - 남북정상회담과 10·4선언을 지지한다는 지난 해 결의안 내용 대신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남북대화가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

- 인권을 유린하는 책임자에 대한 비처벌(impunity) 문제를 다루고 인권침해 책임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재판하여 처벌하도록 촉구
-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 아동권 실태 보고서' 제출(12.1)

-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아시아인권센터는 북한이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와 관련하여 '북한 아동권 실태 보고서'를 작성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 표명(12.24)

- 국가인권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제6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 인식과 요구사항을 피력했다”고 발표
 - “이번 결의안이 북한에서의 고문, 비인간적인 구금상태, 공개처형, 초법적·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및 광범위한 강제노동 등을 언급한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입장 표명
 - 또한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이번 결의안에서 언급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 및 국제사회와의 인권대화에 참여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부연 설명

3. NGO

북한인권정보센터 『2008 북한인권백서』 발간(7.22)

- 탈북자 818명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와 탈북자·방북자가 쓴 단행본 154권, 주간지 6종, 월간지 17종, 학술지 15종, 신문 기사 등을 토대로 수집한 사례를 정리한 백서 발간

미국 인권단체들, 부시 대통령에 탈북자 지원 노력 요청

- 미국의 인권단체들(북한자유연합, 파룬궁의 친구들, 티베트계미국인연합, 중국구호협회, 오픈 도어즈 USA)이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중국에 수감된 탈북자 지원활동가 4명 등 중국 내 수감자 23명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 발송 (VOA, 7.16)

탈북동포회, “중국 탈북난민 복송중단” 집회(8.8)

- 기독교 시민운동단체인 기독교사회책임 산하 탈북동포회가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난민 강제복송 중단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발송
 -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복송 중지와 한국 등 원하는 국가로 출국 허용, 일부 중국인들의 탈북여성 인신매매 방지, 탈북자들을 돕다가 감금된 북한인권 운동가들의 조속한 석방과 감옥 내 비인도적 처우 금지 등을 촉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블랙리스트’ 작성(RFA, 8.25)

- 미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하는 북한의 권력기관과 그 책임자들에 대한 명단 작성 추진 중
 - 국가보위부, 인민보안성, 국경경비대, 정치범 관리소, 노동당 39호실을 조사 대상 북한기관에 포함
 - 이들 권력기관에서 일하는 책임자들의 이름과 직책, 사진 등을 확보해 2010년 ‘북한 내 테러와 강압적 권력 조직’이라는 보고서 발간 예정
 - 기관간 상호관계, 각 기관의 구조, 활동 목적과 수단,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방식 등을 기술할 예정

북한 인권운동가 수전 솔티, 서울평화상 수상(10.7)

- 수전 솔티(미국 디펜스 포럼 회장) 여사는 1996년부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 전개

국제 인권단체, 6자회담 실무그룹들에서 북한인권 논의 촉구(9.17)

- 국제 인권단체들(미북한인권위원회, 노르웨이의 오슬로 평화인권센터 등)은 북핵 6자 회담의 실무그룹을 제외한 모든 실무그룹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촉구

-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제언에서 “유엔총회는 ‘인권보호 책임’ 독트린에 대해 언급하고, 전문가 그룹으로 하여금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이 인권보호 독트린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례 대북결의안의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
-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인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개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표명

대북 인권단체, 북한인권국민캠페인 개최(9.22)

- ‘유엔인권선언 60주년 기념 - 북한 동포와의 희망 나눔, 탈북 고아에게 사랑을!’

- 캠페인 조직위원회에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피랍탈북인권연대, 북한민주화위원회, 열린북한방송 등 국내 대북 인권단체 관계자 80여명이 참여
 - 2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북한인권법 토론회, 24일 오후에는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북한인권 위령제가, 25일 오후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내 정보자유 촉진 방안과 전망’, ‘포스트 김정일,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워크숍이, 25일 저녁에는 서울광장에서 북한 인권콘서트, 26일 프레스센터에서는 ‘북한의 소수자 인권보호 방안’, ‘북한 식량문제와 인권에 관한 논의’,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실용적 접근 방안’이라는 3가지 주제를 놓고 국제회의를 개최

자유북한운동연합, 뼈라 살포(10.10)

- 대북 민간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북한인권운동가 수잔 솔티 여사가 북한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택해 인천 서해상 배위에서 ‘사랑하는 북녘 동포에게’ 라는 글이 실린 ‘뼈라(전단)’를 풍선에 달아 북측으로 전송
 - ‘뼈라(전단)’가 들어있는 각 주머니 속에 미화 1달러와 중국돈 10원짜리도 포함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발간(10.12)

- 2000년 이후 탈북자 100명을 심층면접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정책 및 법률, 실태를 중심으로 작성

평화재단 ‘대북지원 특별법’ 제안(11.25)

-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실이 주최하고 평화재단이 주관한 ‘북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 해결을 위해 정부 예산의 1% 범위에서 5년 등기환을 정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문제 검토

피랍·탈북인권연대, '세계인권선언 60주년 - 비핵·개방·3000 그리고 북한인권' 행사(12.8-14) 개최

-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갇힌 자에게 놓임을(自由飛翔)' 주제로 북한인권 디지털 영상 사진전 개최
 - 10일에는 북한인권 세미나, 13일에는 '북한 어린이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미니 콘서트' 진행

북한인권단체연합회, 국회의원들에 '북한인권법' 찬반 공개질의(12.11)

- 탈북인단체총연합회, 기독교사회책임 등 50개 대북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연합회'는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 전달

4. 분석 및 평가

국제사회,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책임론 확대 촉구 및 구체적 방안 제시

- 문타본 보고관은 금년도 보고서에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책무성을 강조
 - 국제 인권단체들(미북한인권위원회, 노르웨이의 오슬로 평화인권센터 등)은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제언에서 "유엔총회는 '인권보호 책임' 독트린에 대해 언급하고, 전문가 그룹으로 하여금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이 인권보호 독트린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례 대북결의안의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
- 국제사회의 논의를 반영하여 금년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최초로 인권을 유린하는 책임자에 대한 비처벌(impunity) 문제를 다루고 인권침해 책임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재판하여 처벌하도록 촉구

- 미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하는 북한의 권력기관과 그 책임자들에 대한 명단을 작성함으로써 향후 처벌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는 보고서 작성 추진
 - 기관간 상호관계, 각 기관의 구조, 활동 목적과 수단,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방식 등을 기술할 '북한 내 테러와 강압적 권력 조직'이라는 보고서 발간 예정

특정 부문별 북한인권 개선 노력 부각

- 금년도 유엔 총회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
- 종교의 자유
 - 미 국무부는 '2008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포함한 8개국을 종교탄압국으로 재지정
 -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탈북자 72명을 대상으로 종교자유 문제를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창살 없는 감옥 - 북한의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탈북자 증언(A Prison Without Bars: Refugee and Defector Testimonies of Severe Violations of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in North Korea)' 제목의 보고서 발표
- 아동의 권리
 -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아시아인권센터는 북한이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3·4차 국가 보고서 심의와 관련하여 '북한 아동권 실태 보고서'를 작성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

미국 의회, 북한인권재승인법안의 채택

- 북한인권법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비판의 대상
 -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의 존재 부정에 따른 방북 무산
- 2004년 북한인권법이 2008년 9월로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북한인권재승인법안이 채택되어 2012년까지 시효 연장
 - 북한인권특사가 임시직에서 정규직 대사로 승격됨에 따라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6자회담에서 북·미관계와 북한인권 문제 연계 주장 촉구

- 국제 인권단체들(미북한인권위원회, 노르웨이의 오슬로 평화인권센터 등)은 북핵 6자회담의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을 제외한 모든 실무그룹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촉구
- 미국 국무부가 앞으로 6자회담과 북·미 양자회담에서 북한인권특사를 참석시켜 북한 인권문제와 탈북자 문제를 제기토록 하겠다고 표명
 -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달려있다고 강조
-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8.6)을 통해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공식적으로 표명

이명박 정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인권 개선 문제 중시

- 한국과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 가치동맹 강화 차원에서 최초로 북한인권에 대한 한·미간 공조 표명
- 한국 정부는 최초로 제63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찬성 표결
 -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 다른 사안과 분리해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공동제안국에 참여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관련 관심 증대

-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관련 정책 권고 활동
 -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노력 권고
 -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식량지원을 정치적 사안과 분리해 추진할 것을 통일부 장관에게 권고
 -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장관에게 월선 북주민 조사·처리 문제점 지적
 -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 표명
-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9차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3-5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는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행사 확대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의원 네트워크의 활성화
 - 한·미·일 국회의원 131명은 중국 탈북자 구출 서명 운동 전개
 - 제5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 개최
- 일본은 ‘납치문제 기타 북조선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 인권침해 문제 계몽주간 행사 개최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행사 개최
 - 유엔인권선언 60주년 기념 - ‘북한 동포와의 희망 나눔, 탈북 고아에게 사랑을!’ - 북한인권국민캠페인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 개최

북한의 대응



1. 미국에 대한 반응	19
2. 일본에 대한 반응	22
3. 유엔에 대한 반응	28
4. 남한에 대한 반응	30
5. 분석 및 평가	40

1. 미국에 대한 반응

중앙방송, 미국의 반테러전 인권유린 비난(9.26)

-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감행되는 인권유린 범죄> 제하에, 미국이 국제인권재판관으로 행동하면서 세계 곳곳에 반테러전을 선포하고 “현대판 십자군 원정의 길에 나선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극악한 인권유린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
 -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은 절대로 통할 수 없다>는 논평을 통해, 미 제국주의의 “세계제패야망과 힘의 정책에 국방력강화로 강경 대응” 주장(로동신문, 9.26)
 -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는 제하에, 한미 군사훈련 등을 거론하며 북침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1950년대의 전쟁 때와는 비할 바 없는 강력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민주조선, 9.28)

로동신문, 중·미 간 인권대립 보도(10.8)

- <더욱 표면화되는 대립과 모순> 제하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항목에 기초한 협상 진행을 요구(9.19)하였으며, 이와 관련 미국이 인권원칙을 국제관계에서 강화하는 것을 비난
 - 제기된 문제에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의 표준강관과 구형강관, 복합편직포대 등에 대해 미국이 반보조금 및 반투매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된다고 언급
 - “미국이 마치도 저들이 <국제재판관>이나 되는 것처럼 이 나라, 저 나라의 <인권>과 <종교> 문제를 걸고들며 남의 나라 내정문제에 대해 시비질하며 간섭하는 그릇된 행동”이라며 비난

로동신문, 미국의 반테러전으로 인한 인권침해 비난(10.9)

- <분노를 자아내는 인권유린만행> 제하에, 독일주둔 미군 3명이 이라크에서 살해죄로 기소되었다고 언급하면서, 미군이 반테러전을 명목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
 - “기만적인 <반테러전>의 미명하에 미제침략군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살인, 방화, 약탈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사람들이 <반테러전>을 통하여 극악한 살인마, 인권유린자로서의 미군의 추악한 정체가 날날이 드러나고 있다. ...”

로동신문, 유엔총회 북한대표 연설 보도(10.16)

- 유엔총회 제63차 회의 6위원회 회의(10.8) 국제테러제거조치 논의시 북한은 연설을 통해 반테러전의 명목으로 주권침해와 인권유린이 정당화되고 있다고 주장
 - “테로를 방지하기 위한 유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로행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대되면서 인간의 생명과 사회의 안정, 국제평화와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더욱이 《반테러전》의 명목 밑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주권침해와 극도의 인권유린행위들이 정당화” 되고 있다는 논리
 - <국제적 배척을 당하는 강권정책> 제하에,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독단과 전횡으로 인해 국제적 비난이 있다고 주장(로동신문, 10.18)

로동신문, 미국의 인권공세 비난(11.6)

-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옹호》, 《민주주의》타령은 궤변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 “인권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할 자주적 권리” 라고 규정하면서, 자주적인 국가정치에 의해 보장된다며 자주권 존중을 주장
 - “지나온 력사와 오늘의 현실은 인권이자 곧 국권이며 국권이자 곧 인권이라는 귀중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똑똑히 새겨주고 있다” 며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는 북한의 “국제적 위신을 허물고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을 국제화하며 군사적침략의 구실을 마련” 하고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해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

로동신문,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거론을 침략구실로 규정(11.6)

-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옹호》, 《민주주의》타령은 궤변이다’ 라는 논평을 통해, 미국의 對北 인권문제 거론은 “국제적 위신을 허물고 고립압살 책동을 국제화하며 군사적 침략구실을 마련하자는 것” 이라며 반제투쟁 촉구

로동신문, 미국의 반테러전 비난(11.8)

- <정당화될수 없는 국경침범행위>라는 논평을 통해 미국의 반테러전을 자주권 침해로 규정
 - 북한이 10월 30일 외무성대변인대답을 통하여 “수리아의 존엄과 령토완정을 엄중히 침해한 미국의 행위를 단호히 규탄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수리아정부와 인민의 정당한 노력과 조치들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었다”고 소개

평양방송, 미행정부 고위관료 북한인권 제기 중단 촉구(11.10)

-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감행되는 인권유린행위’ 제하에, 미 행정부 고위관료들의 대북인권문제 제기 관련 “미국의 국내외 인권유린행위 폭로 및 반복 인권공세는 어불성설격”이라고 반발하면서 중단촉구

민주조선, 미국의 해외군사적 공격을 국가테러행위로 규정(11.12)

- 민주조선은 <국가자주권을 유린하는 란폭한 테러행위>라는 논평에서, 미국의 시리아와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의해 담보된 자주권과 령토완정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이며 로골적인 국가테러행위”로 규정
 - “이것은 오늘날에 와서 세계의 모든 나라와 인민들에게 새로운 안보원리를 깨우쳐 주고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새로운 안보원리란 나라의 자주권은 강력한 국방력에 의해서만 담보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인권공세를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11.13)

- ‘제국주의의 인권공세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요인’ 제하에, 북한은 미국의 인권위협에도 불구하고 인민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켜갈 것임을 강조
 - “제국주의 반동들이 들고 나오는 인권옹호요 민주주의요 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간섭과 지배주의적 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으로 규정

조선중앙통신, <세계인권의 날> 기념 미국 비난(12.10)

- <세계인권의 날(12.10)>을 기념하여 ‘편이한 인권기준이 가져온 인권실태’ 제목 하에, 미국의 ‘인권보고서’는 “각국의 사상과 이념 등 각이한 차이점이 결여된 내정 간섭과 압살책동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허구”라며 미국을 “인권불모지”라고 주장
 - ‘인권이자 곧 국권이며, 국권이자 곧 인권이다’ 제하에, 미국의 대북 인권문제 제기는 “우리(北)의 국제적 위신을 허물고 대북 고립압살 책동을 국제화하며 군사적 침략의 구실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평양방송, 12.10)

민주조선, 미국의 무기수출 비난(12.23)

- ‘인권가면을 벗어던져야한다’는 논평을 통해 인권 옹호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이 “자신들이 지적한 인권문제 국가들에 무기 수출을 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세계 인권보장은 불가능하며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비판

2. 일본에 대한 반응

조선신보, 평양선언에 기초한 외교복원 주장(8.22)

- <랍치문제의 재조사, 시험대에 오른 후쿠다정권, 과제는 <평양선언에 기초한 외교> 복원> 제하에, 일본에게 평양선언 복원을 촉구
 - 북·일 정부간 실무회담은 “개별적인 현안에 얽매이는 협소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평양선언에 기초한 외교를 복원” 시켜야 한다고 주장

로동신문, 총련중앙 긴급집회 보도(10.18)

- <일본당국의 《제재》조치의 연장을 단호히 규탄한다> 제하에, 일본당국의 총련간부 재입국 및 총련간부 및 재일교포들의 북한창건 60돌 경축행사에 참가규제를 비난
 - “일본당국이 식민지통치의 희생자들과 그 후손들인 재일동포들을 보호하고 동포들의 진정한 조직인 총련의 합법적지위를 보장할 대신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공화국에 대한 이른바 《압력정책》의 과녁으로 삼고 온갖 정치적탄압과 인권침해를 감행” 하는 것은 유래가 없는 “비인도적이고 비렬한 특대형의 범죄행위”라고 규정

민주조선, 일제하 생체실험 학술회의 보도(10.24)

- <만천하에 드러나는 극악한 생체실험만행> 제하에,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 일본 제731부대 만행 관련 국제학술회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본의 과거 인권유린을 부각
 - “중국의 할빈시로 말하면 과거 일제의 《세균연구소》가 있던 대표적인 장소이다. 이곳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당시 《제731부대》가 일본정부의 공공연한 비호묵인 하에 살인적인 생체실험만행을 감행” 하였다고 보도

중앙방송, 일본 6자회담자격 박탈 요구(10.25)

- 일본이 납치문제를 구실로 대북제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납치자 문제를 6자회담에서 거론하는 일본의 태도에 강력 반발
 - “납치문제대책본부회의라는데서 일본 반동들은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며, 6자회담 틀 거리 내에서의 에너지 지원”에도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식선포

로동신문·민주조선, 대북제재 연장 비난(10.25)

- 로동신문은 <간상배식의 교활하고 졸렬한 처사>라는 개인논평을 통해 납치자 문제를 근거로 대북제재를 6개월간 연장한 것을 “비렬한 추태”라고 규정
 - 일본이 “수치스러운 과거죄악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공화국이 아량을 가지고 선의의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비난
- 민주조선은 <부질없는 대결소동으로 차례질것은 자멸뿐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납치문제를 이유로 한 대북제재 연장 비난
 - “요즘 일본반동들이 납치문제를 떠들며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얼마전 일본국회는 이른바 납치문제를 걸고 우리 나라 선박의 일본입항금지를 포함한 대조선제재를 6개월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납치문제 북·미수교 정상화 전제조건화 비난(10.28)

- <정치사기군들의 잔망스러운 흥정놀음>이라는 논평을 통해, 일본이 납치문제 해결을 정치적 흥정에 활용하고자 하며,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화하고 있다고 지적
 - “일본수상 아소는 그 무슨 《납치문제대책본부》 회의에 참가하여 납치문제해결이 없이는 일조국교정상화를 기대할수 없다고 못박았다. 세상만사가 저들이 하고 싶은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본특유의 교만하고 잔망스러운 언행이다.”
- 조선중앙통신은 ‘부질없는 대결소동으로 차례질 것은 자멸뿐이다’ 제하로 과거범죄에 대한 성근한 반성과 응당한 배상을 주장하며 제재와 압력으로 차례질 것은 자멸 밖에 없다고 강조
 - “평양방송은 ‘파렴치한 영토강탈 행위’ 제하로 일 반동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조선 재침야망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아시아 나라들은 공동보조로 파렴치한 영토팽창 책동을 짓눌러 버려야 한다고 주장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일본의 유엔총회 대북결의안 상정 비난(11.4)

-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의 대북인권결의안 참여를 “유럽동맹과 공모하여 반공화국 <인권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기 위한 놀음”이라고 규정하면서, 인권을 구실로 내정 간섭하려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비난
 - 2007년 4월 유엔인권이사회 제7차 회의의 “복사판”이라며, 일본은 “전대미문의 인권범죄를 청산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나라”로 인권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총련의 활동과 재일동포의 생존권 위협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
 -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총련의 단체들과 재일동포에 대한 강제수색과 폭행, 체포 소동을 벌리고 있으며, <만경봉-92>호의 입항을 금지함으로써 수많은 재일동포들의 조국왕래와 혈육과의 상봉의 길을 막고 있다.”
 - “다른 나라의 사회정치제도와 생활방식을 시비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곧 엄중한 인권유린범죄”
- 로동신문은 <제손으로 제눈찌르는 격의 자살행위> 제하에, 최근 일본 당국의 총련지부사무소 등에 대한 ‘세리사법위반’ 명목 하 강제수색 등은 “4차에 걸친 대북 제재 연장 등에 따른 정치탄압, 우리 자주권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반발
 - “지난 10월 29일 일본반동들은 그 무슨 《세리사법위반》을 떠들면서 수많은 경찰무력을 내몰아 도쿄 신주꾸조선회관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연계를 일체 차단한 가운데 무려 10시간 가까이 도쿄도 신주꾸상공회, 도쿄도상공회 서북 부합동경리실, 신주꾸협동조합, 신주꾸납세조합, 총련지부사무소 등에 대한 강제수색소동을 벌렸다. 이것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천부당하고 파쑈적인 정치탄압인 동시에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침해 행위”
 - “강제수색의 명분으로 들고나온 그 무슨 《세리사법위반》이라는 것은 저들의 탄압 책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한갓 구실에 불과하다. 알려진데 의하면 이번의 강제 수색은 1년 전에 이미 결착된 문제를 또다시 끄집어내어 감행된 것으로서 사실상 총련말살에 목적을 둔 파쑈적란동의 다른 것이 아니다.”
 - 강제수색사건은 북한을 압박하여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

로동신문·중앙방송, 일본 위안부문제 부각(11.5)

- 중앙방송은 <피고석에 앉아야 할 특대형인권유린자의 추태>라는 논평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부각시켜 일본의 대북인권결의안 제출을 비난

- “일제의 《위안부》범죄는 조직적 및 집단적성유린행위이며 최대의 반인륜적인 죄악으로서 그에 대해서는 이미 세상에 공개될대로 공개되었다. 일본은 성노예범죄만으로도 특대형권인권유린자로 규탄받기에 충분하다.”
- “피비린내나는 과거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청산문제에서 백지상태인 일본은 응당 인권법정의 피고석에 앉아야 할 첫 번째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저들의 특대형인권유린범죄보따리는 두터운 보자기에 깊숙이 감싸두고 우리의 허무맹랑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감히 입에 올리며 《인권결의안》 제출놀음을 벌리는 것은 그들 특유의 파렴치성과 고약성의 극치일 뿐 아니라 참다운 인권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다.”

민주조선, 일본의 과거 인권유린 청산 촉구(11.5)

- <일본을 국제인권심판대에 끌어내야 한다>라는 제하에, 독일과 이탈리아가 전후 사죄 배상을 하였다든 사실을 언급하면서, 일제 하 일본의 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 촉구
 - “1992년 5월 5일에 있는 유엔인권소위원회산하 현대형의 노예에 관한 실무그룹 제1차 회의에서 국제교육개발협회 대표는 일본이 1932년에 가입한 국제법과 《강제 노동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권을 일본자신이 유린한데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로동신문, 일본의 북한인권문제 제기 비난(11.13)

- <특급인권범죄자의 폰수없는 송사질>이라는 논평을 통해, 일본의 총련단속의 부당성을 언급하면서, 역사적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인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 하는 것을 비난
 - “일본반동들은 올해 1월 21일과 22일 이틀간에 걸쳐 《세리사범위반》 혐의로 재일본 조선교포부상공회와 그 산하 산탄상공회를 비롯한 관련시설 10개소를 강제 수색하고 산탄상공회의 현직일군을 체포해가는 것으로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새로운 탄압만행의 막을 올렸다.”
 - “인권문제에서 일본은 력사적으로 가해자이고 우리는 피해자이다. 일본은 특급인권 피고로서 마땅히 인권법정에 나서서 엄벌을 받아야 하며 피해자인 우리에게 특대형인권유린죄악의 빔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철면피하게도 저들의 산더미 같은 인권죄악은 뒤꼁방에 깊숙이 묻어두고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인권죄명》을 들씌우며 알가왈부하고있다.”

로동신문, 일본 국내납치문제 부각(11.20)

- <제 집안의 납치사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논평을 통해, 일본 내 납치범죄(어린이, 여성, 외국여성 등)를 열거하면서, “일본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납치의 왕국”이며 “특대형 납치범죄국”이라고 비난
 - 일제강점시기 강제징용 및 위안부 등을 근거로 “일본이야말로 납치의 본산지이며 특대형납치범죄국”임에도 불구하고 “철면피하게도 저들을 《납치 피해자》로 묘사하면서 《납치문제해결이 없는 과거청산을 할수 없다》는 소리를 탕탕”하고 있다고 주장
- 조선중앙통신은 ‘피고석에 앉아야할 특대형 인권유린자의 추태’라는 제목 하에 일본의 대북 인권결의안 유엔 제출 관련 “우리를 국제무대에서 고립시키려는 반북 모략 책동”이라며 일제의 성노예범죄 등 과거죄행 폭로 및 先과거청산 촉구(11.6)
 - ‘특급인권범죄자의 훈수 없는 송사질’ 제목 하에 인권문제와 관련 일본은 역사적으로 가해자이고 북한은 피해자라고 주장(11.13)

평양방송, 일본의 일제하 인권유린 부각(11.20)

-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조선인 대학살 만행’ 제하로도 일제의 「훈춘사건」 및 「경신년 대토벌」 등 조선인 대학살만행 폭로 및 일본이 “사죄·배상 대신 역사왜곡·독도 문제·반북정책 책동으로 죄악을 덧쌓고 있다”며 한국의 대일외교 정책을 결부시켜 비난

로동신문, 일본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반대(11.23)

- <과거청산을 떠나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논평을 통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전쟁과 평화문제 등 주요 국제문제를 다루는 유엔 핵심기구로, 유엔개혁과 함께 유엔의 사명과 역할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자신들의 과거청산을 먼저 하여야 하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
 - “일본은 국제무대에서 믿을 수 없는 나라, 위험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다. 일본이 유엔안보리사회 상임이사국이 되면 유엔의 권능을 악용하여 그 어떤 상서롭지 못한것도 서슴없이 할수 있으며 따라서 세계가 전쟁재난을 당할 수 있다. 일본의 속심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은 다름 아닌 과거청산이다.”

조선신보, 일본의 대북인권정책 비난(11.28)

- <조선 《제재》> 늘음과 강제수색에 항의>를 통해 일본의 대북제재 연장과 총련 강제수색에 강력히 반발
 - <유엔 《인권결의》를 단호히 배격>이라는 제하에 조선외무성대변인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과 EU가 주동이 되어 꾸며낸 《인권결의》는 조선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동기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허위와 날조로 일관되어 있다”며, 인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민간인학살, 일본의 과거죄행과 재일조선인탄압, 서방나라들에서 만연하는 외국인배척과 소수민족차별이 문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을 보도

민주조선, 일본당국 총련 강제수색 인권유린 규정(11.29)

- <비렬한 정치탄압, 정당한 항의투쟁>이라는 제하에,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상공회의소 등 강제수색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정치탄압과 인권유린”이라고 주장

로동신문, 일본의 대북제재 연장 비난(12.2)

- <국제적망신과 고립을 면치 못한다>라는 논평을 통해, 일본의 대북제재 연장에 대해 “의도적인 도발행위”로 “6자회담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조선반대핵문제가 풀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군사대국화와 핵무장화의 명분을 세워보려는” 의도라고 주장
 - 북한선박의 “일본입항금지조치는 그것을 조국래왕의 기본교통수단으로 리용해 온 재일동포들 특히 고령자와 병약자, 장애자들의 조국방문과 혈육과의 상봉을 가로막고 재일조선학생들의 조국에로의 수학여행”을 저해한다고 비난하면서, 일본이 과거 “특대형반인륜적범죄”를 부정하는 등 “인권문제에 대해 론할 그 어떤 명분도 자격도 없다”고 주장

민주조선, 일본의 총련 단속 비난(12.9)

- <일본당국의 정치탄압과 인권유린행위를 단죄규탄하는 재일조선인중앙집회 진행> 제하에, 12월 6일 동경에서 열린 재일본조선인 중앙집회를 보도
 - 11월 27일 동경 경시청公安부가 기동대무장경찰을 동원 재일본조선상공연합회와 동경도상공회사사무소들에 대해 수색했다고 주장
 - <세리사법위반>을 근거로 10월 29일 동경 신주꾸상공회를 비롯 총련기관을 강제수색하였으며, 상공회 총무부장과 이전 부회장을 부당한 이유로 체포하고

- 수색에 항의하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구금했다고 주장
- “재일동포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역사적책임과 도의적, 법적의무를 지니고 있는 일본당국이 오히려 동포들의 인권을 짓밟고 그들에게 정신육체적 고통과 불행을 들씌우고 있는 최악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무마될 수 없는 흉악한 국가범죄이며 비인간적인 악행”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

로동신문, 일본의 납치문제 근거 제재 비난(12.27)

- <<납치문제> 소동은 백해무익한 란동>이라는 논평을 통해, 일본이 납치문제를 이유로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북한 선박입항금지 조치 등 대북제재조치 연장과 추가제재 조치를 언급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정의와 인류량심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라고 주장
 - “2차 세계대전시기 일제가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침략과 약탈, 강제련행 및 납치, 살인, 인권유린 등 온갖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을 부각
 -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관련 결의안이 채택되었다는 점 언급

3. 유엔에 대한 반응

평양방송, 북한대표 유엔총회 연설 소개(11.4)

- 북한 대표가 10월 29일 유엔 총회 제63차 회의 3위원회에서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침략과 전쟁 종식, 인권문제정치화와 2중 기준 제거”를 주장하였다고 보도
 - “가장 엄중한 인권유린행위는 침략과 전쟁이며, 서방의 일부 나라들이 인권을 정치화로 세계적인 인권보호 증진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일본은 깨끗한 과거청산과 현실 자각이 없이는 밝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우리 정부는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조선중앙통신,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 채택 비난(12.1)

- ‘인권유린왕초들의 주제넘은 짓’ 제하 유엔의 ‘대북인권결의’가 채택된 데 대해 조선의 현실을 무시한 정치모략의 산물이라고 비난하면서, 남한이 대북인권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결의 채택에 앞장선 일본과 EU나라들은 “세기를 두고 다른 나라들에 침략전쟁, 살인전쟁을 감행한 역사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국들로서 국제무대에서 그 누구의 인권상황에 대해 논할 자격을 잃은 나라들”이라고 비난
- “서방의 인권소동은 그들 자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전 세계를 서방식으로 만들려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고 인권의 정치화와 이중기준, 거만한 훈시와 노골적 내정간섭으로 특징지어지는 인권재판관 놀음은 여러 나라들에 인권개선을 가져오기는커녕 나라들 사이의 불신과 대결만을 초래하고 있음.”
- “우리는 일본과 EU가 우리의 인권을 거들면서 공화국의 존엄과 이익을 침해하는데 대해 절대로 용납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으며 인권공세에 매여달리면 달릴수록 선군의 기치 높이 자주권 수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조선신보, 북한대표 유엔총회 발언 소개(11.10)

- <인권문제는 특정나라 독점물이 아니다-유엔총회에서 조선대표>라는 제목 하에, 재일조선인 차별, 탄압문제 언급하면서, 일본의 과거청산과 유엔사령부 해체요구 발언을 소개
 - “10월 29일 유엔총회 제63차회의 3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인권보호증진>토의시 조선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발전 시켜나갈 것이며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기여할것이라고 강조”
 - “인권문제는 그 어떤 특정한 나라나 세력들에게 부여된 특권적인 독점물이 아니며 국제인권문제에서 <재판관>과 <피고>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언급
 - “서방의 일부 나라들이 인권을 정치화하고 저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는 발전 도상나라들을 선택적으로 지명공격하는 것은 나라들 사이의 대결을 격화시키고 세계적인 인권보호증진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있다.”
 - “10월 27일 유엔총회 제63차 회의 4위원회 회의에서 연설하여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요구”

로동신문, 유엔 내 인권논의 비판(11.21)

- <날로 악화되는 신경과민발작증>라는 논평에서, 유엔 회의에서 인권논의에 대한 개별국가들을 반발을 소개하면서 인권이 정치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현실과 미국의 정치적 의도를 비난
 - “며칠 전 유엔주재 이스라엘 부대표 아니엘카몬이 유엔인권리사회의 년례보고서를

검토하는 한 회의에서 지금까지 유엔인권리사회가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한것은 《유엔의 그 어느 성원국을 반대하는 결의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투정질을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인권기구는 과대망상적이며 차별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공격목표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샅대질을 하였다. 그의 망발은 이스라엘의 영토팽창책동과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횡포한 학살만행을 반대규탄하는 나라들에 대한 로골적인 위협공갈이며 정치적 압력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인권옹호》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뚜렷이 드러내놓은 것으로 된다.”

- “이스라엘은 지난 시기 유엔에서 특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재판관》행세를 해온 미국의 지지보호 밑에 많은 문제들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처리하여왔다.”

4. 남한에 대한 반응

민주조선, 촛불집회 인권조사 보도(7.24)

- 전교조가 정부에게 7월 19일 촛불집회관련 AI의 인권조사결과를 수용하도록 촉구했다고 보도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한국내 ‘종교차별’ 비난(8.11)

- <종교차별, 인권탄압행위를 단죄> 제하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불교인권 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종교차별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보도하면서, 이는 “현정부의 인권유린실태를 보여준다”고 비난

로동신문, 한·미 정상회담 인권문제 논의 반발(8.24)

- <대결기도를 드러낸 불순한 인권소동> 제하에 한국이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를 거론한 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
 - “<북인권문제가 거론된것은 처음>이라느니, <인권개선>이 그 무슨 <기준이고 원칙>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꾸며내어 우리 공화국을 모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
 - 남측이 “최근 <전면적인 대화>니, <경제협력>이니 뭐니 하였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외세의 장단에 놀아나며 대화와 경제협력을 전면적으로 봉쇄” 하고 있다고 주장

민주조선, 촛불시위 대응을 ‘인권유린’ 이라고 비난

- 〈드러난 《법치》의 진면모〉라는 제목 하에, 촛불시위에 대한 남측의 진압에 대해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참혹하게 유린되었다고 보도

조선중앙통신, 北 인권문제 제기를 ‘반공화국 소동’으로 비난(9.5)

- 남한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미국의 반공화국(반북) ‘인권’ 공세와 곡조를 같이” 하면서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 수행에서 돌격대로 나서고 있다”고 비난
 - 조선중앙통신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남한 정부 대표가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은 “동족 사이에 적대감과 불신을 고취하고 북남관계를 대결어로 몰아가기 위한 고의적인 정치 도발”이라고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존치를 들어 “오늘날 인권문제가 실지 존재하는 곳은 남조선”이라고 언급

조선중앙통신, 남한의 대북인권정책 비난(9.5)

- 한국정부가 북한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의 반복 인권공세에 공조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
 - “통일부에 북한인권전담과를 내은 역도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국책연구기관 등을 동원하여 우리의 인권실태와 관련한 정보 수집을 본격적으로 다그치는 망동”
 - “뿌리 깊은 반공화국 적대의식의 뚜렷한 표현으로서 동족사이에 적대감과 불신을 고취하고 북남관계를 대결어로 몰아가기 위한 고의적인 도발”
 - 〈통일애국에 칼질하는 파썸적 망동〉 제하로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 실형 선고는 “반통일적 파썸폭거”라고 비난
 - 〈침략과 살육을 찬미하는 극악한 반역도당〉 제하로 9일 인천상륙작전을 재연하는 기념행사와 관련 “엄중한 민족반역행위”라고 비난
 - 〈평화수호는 조국통일운동의 절박한 과제〉제하로 주한미군은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핵전쟁의 근원이라며 반전평화수호투쟁” 선동

평양방송, 북한주민들의 식량문제 해결 노력 부각(9.12)

- <“남조선 동포 여러분”에게 “자체의 힘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펼쳐나선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의 투쟁”>이라는 제하에 세계적 식량위기와 연계 북한주민들의 자체적 식량문제 해결 노력을 소개
 - “애써 가꾼 낱알을 한알도 허실함이 없이 말끔히 걷어 들이기 위한 가을걷이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 것은 현 시기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며 평남 삼봉 협동농장 농민들, 평양시 락랑구역 농기계작업소 근로자들의 추수준비 상황을 소개

로동신문, 남한 인권침해 부각(9.12-28)

- <여성인권의 폐허, 장본인은 누구인가>라는 제하에 남측 촛불집회 및 등록금시위에서 여성인권유린이 발생하였다며,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장본인이 정부라고 주장(9.12)
 - <인간의 자주적권리가 짓밟히는 인권불모지>(9.24)라는 제목 하에, 남측이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모략극으로서 거기에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안고있는 저들의 허물을 가리우고 반정부투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박
 - “인권은 사회적인간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자주적권리이다. 사람이 정치사상 생활에 대한 자유와 권리, 창조적 활동의 자유와 권리, 생존의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살 때 인권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다. … 생존권은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권리이다” 광우병 파동으로 남한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
 - <비정부기구들 남조선당국의 인권유린행위를 규탄>이라는 제하에, 유엔인권이사회 제9차 회의에서 비정부기구들이 남한당국에 의한 촛불시위 인권유린행위를 규탄했다고 보도(9.28)

조선중앙통신, 남한정부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구성 비난(9.28)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조국전선)가 남한의 국가 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 존엄과 체제에 대한 악랄한 모독”이자 “참을수 없는 도발”이라며 …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함.
 - “우리의 존엄이고 생명인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중상모독하며 북남관계를 침해한 대결국면으로 몰아가려는 자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밝힘.
 - 남한 정부의 북한인권특위 구성 방침이 미 상원에서 ‘북한인권법’을 4년 연장하는

- 내용의 ‘북한인권법재승인법안’이 통과된 직후 나온 점을 언급,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편승하여 우리를 모해하고 중상하는데 광분하여온 역적패당의 친미사대적이며 반공화국 대결적인 본성을 다시금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함.
- 한국정부의 북한인권 제기는 “사대매국과 파쇼적 탄압, 경제파탄으로 저들에게 쏠린 인민들의 원한을 탄 데로 돌려 정치적 혼란과 위기를 모면하고 남조선에서 통일기운을 말살해보려는 불순한 기도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

로동신문, 남한 북한인권 논의 비난(10.7)

- 남한의 북한인권관련 기준논의들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실현의 돌격대>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존엄을 훼손한 것으로 주장
 - “그 무슨 《북한인권기록보존소》라는 것을 설치하고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다루어나갈 것》이라고 떠들어대면서 범죄적인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벌이고 있으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그 무슨 《인권문제》를 거들면서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헐뜯었으며 남조선미국 《공동성명》에서 《북한인권문제가 거론된 것은 처음》이라느니, 《인권개선》이 그 무슨 《기준이고 원칙》이라느니 하고” 북한 인권문제가 논의된 점을 강하게 반발

로동신문, 촛불집회관련 인권침해 실태보고(10.22)

- <인권유린행위를 정당화한 추태를 폭로단죄>라는 제하에, 남측 민변, 참여연대,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7월 14일 경찰 인권침해실태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다고 보도
 -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경찰보고서에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은 부정확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호하고있다》고 사실을 오도한데 대해 언급” 하였다고 지적

로동신문, 남한의 인권침해 비난(10.30)

- <파쇼의 란무장, 인권의 불모지>라는 제하에, 촛불시위 진압과정 등에서 남한당국에 의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주장
 - “남녀로소를 가림없이 폭압의 몽둥이를 무자비하게 휘두르고 있는 ... 파쇼도당의 만행으로 말미암아 지금 남조선사회에는 공포와 불안의 분위기가 떠돌고있으며 부정의가 정의를 짓밟고 파쇼가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거꾸로 된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민주조선, 한국전 납북자 문제 논의 의도 비난(10.24)

- 로동신문은 한국전쟁 중 민간인 납북이 북한의 군사적 필요에 조직적으로 저질러졌다는 한 연구자의 주장에 대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전면 차단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비난
 - <대결 미치광이들의 불순한 날조품>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한국전쟁납북사건 자료원(KWARI) 주최 허만호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6.25 전쟁중 납북사건은 북한의 전쟁 정책의 일환이었다”며 미국 국립 문서보관소의 비밀해제기록물에 근거 “1950년 여름과 가을” 남한의 군과 경찰이 “미국의 묵인 밑에 최소한 10만 명의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사실을 폭로” 하였다고 주장
 - 이에 대해 “북에 의한 그 무슨 민간인 납치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본 적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한. 어용학자들이 “6.25전쟁시기 《민간인납치》”문제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도발”이라고 반발하며,
 - 북한은 허 교수의 발표 내용을 ... 정부의 대북정책과 연결지어 그 목적은 “파국 상태에 놓인 북남관계를 극한점으로 몰아가는 동시에 남조선 사회에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불어넣고 불신을 야기시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전면 차단하자는 데 있다”고 밝힘.
- 민주조선은 <대결의 추구하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라는 제하에, “6.25 전쟁시기 《민간인납치사건》” 논의에 대해 비판
 - “어용학자들이 떠드는 《민간인납치지》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들은 지난 조선전쟁 시기 자원적으로 의용군에 입대했던 사람들이며, 미국의 식민지 통치에 침을 빨고 진정한 삶의 품을 찾아 스스로 북행길에 오른 사람들”
 - 이들이 북한에서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라고 언급
 - 역으로 전쟁시기 “평화적 주민들에 대한 조직적인 납치행위를 감행한 것은” 미국과 남측으로 “원자탄공갈과 총칼위협 등으로 수많은 우리 북의 동포들을 남으로 유인납치” 했으며, “남조선적십자사가 공식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수는 무려 45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민화협의 남한 진보단체 탄압증지 촉구 보도(11.1)

- 민족화해협의회가 남한당국의 진보운동단체 탄압을 “6.15시대의 전진을 가로막아 보려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함.
 - 평양방송은 ‘파쇼의 난무장, 인권의 불모지’ 제하, 한나라당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감을 “저들의 파쇼적인 친북좌파세력 척결소동을 합법화하기 위한 목적에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10.31)

민주조선, 한나라당 대북인권문제 논의 비난(11.6)

- ‘제코나 씻는게 좋을 것 같다’ 제하, 최근 한나라당의 대북 인권문제 제기 관련 “6.15·10.4선언 이행을 완전히 차단하며 북남관계를 지금보다 더 악화시키려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라고 비난
 -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세계가 다 인정하고있다. 국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이 인간의 자주적 권리와 존엄을 옹호하는 것으로 일관되어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에서 《인권문제》란 있어본적이 없고 또 존재할수도 없다.”
 - 중앙방송은 ‘인권유린 범죄자들의 주제넘은 인권타령’ 제하로 한나라당의 대북 인권문제 제기는 “우리(北)의 존엄과 권위를 깎아내리고 북남 대결을 고취하기 위한 흥심의 발로”라며 11월 6일자 민주조선의 ‘제코나 씻는게 좋을 것 같다’ 제하 논평 내용과 일치(11.10)

조선중앙통신, 남한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 공동발의 비난(11.12)

-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중앙위원회 성명을 통해, 한국이 제63차 유엔총회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것을 ‘반공화모략극’으로 규정하면서, “이미 유엔이 일차하게 지지환영하였고, 이번 《결의안》이라는데 들어있었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는 문구마저 삭제하게 함으로써 《선언존중》이요 뭐요 하는 가면까지 완전히 벗어던지고 반공화국대결적 정체를” 드러냈다고 비난

로동신문,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의도 비난(11.18)

- <사태악화를 키질하는 정치적도발>이라는 논평을 통해, 한국의 북한인권문제 관련 논의는 북한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부정으로 “전면대결선언”이며, 북한체제를 국제적으로 고립하기 위한 정치적 모략이라고 반발
 -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 인권문제는 애당초 제기조차 될 수 없다. 그 무슨 《인권문제》라는것은 미국을 비롯한 내외반공화국세력이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을 흐려놓고 국제적으로 고립압살하기 위해 들고나오는 정치적

모략의 산물이다. 미국이 이미 국가정책으로 립법화한 《북조선인권법》을 《북을 핵과 〈인권〉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압박하는 기틀》, 《북의 〈체제붕괴〉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규정한것을 놓고도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의 주권테로적 이고 모략적인 성격을 충분히 짐작할수 있다.”

민주조선, 한국의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비난(11.18)

-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는 광대극>이라는 제하에, 한국의 북한인권문제 제기는 남북관계를 고의로 악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제63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은 북한에 대한 “로골적인 도발”이라고 비난
 - “세계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하고 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국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작성, 실시되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누구나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있다.”
 - 한국정부가 북한군과 인민을 자극하면서 북한인권문제를 지속 제기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내부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통치위기수습”이라고 규정

평양방송, 남한의 보수인권논의 비난(11.22)

- ‘인권문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 제하, 최근 한나라당 대표 및 우익 보수 세력들의 대북 인권문제 제기 관련 “촛불시위 탄압망동 등을 보면 대북 인권문제 제기는 어불성설”이라며 반정부·반한나라당 투쟁 선동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구성 비난(11.25)

- <파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 제하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에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꾸며내고 내외에 여론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거부하며 대결과 전쟁으로 줄달음치는” 것으로 “간과할 수 없는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비난
 -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인권문제는 제기될 수 없다는 것이 “누구나 아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
 - 인권문제제기가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용납지 못할 모독”이라고 반발
 -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북을 두 가지 측면에서 압박하는 기틀>, <북의 체제붕괴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규정한 미국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비난

- “불순하기 그지없는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집요하게 벌리며 그 무슨 《북인권 특별위원회》라는 것까지 내온것은 단순히 우리제도에 대한 무지로부터 빚어진 결과라고 볼수 없다. 그것은 명백히 외세와 공조하여 북남대결을 격화시키며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하려는 범죄적기도의 발로이다.”

로동신문, 북한인권문제제기 민족반역행위로 규정(11.25)

- <반공화국대결책동은 최악의 민족반역행위> 제하 논평을 통해,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남측의 “대결책동을 저지, 분쇄하는 거족적 투쟁에 민족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투쟁 촉구

중앙방송, 한국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비난(11.25)

-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행위> 제목하에 남한이 유엔총회 제63차 회의에서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고립 압살하려하고 있다고 비난
 -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대변인, 11월 19일 남한 정부의 “반북인권소동” 규탄 담화 발표 (11.27)

민주조선, 남한정부의 대북인권제기 중단 촉구(11.28)

- <민주위협수위를 넘어서 ‘인권모략’소동> 제목하에, 남한 정부의 “대북 인권 모략 책동이 계속되는 한 파국적 위기의 북남관계는 해소될 수 없다”며 북인권 특별위 해산 및 국제공조 등 대북 인권제기 중단을 촉구

로동신문, 대북전단살포 비난(11.29)

- <빠라살포사태의 장본인은 누구인가> 제하에 논평을 통해, 남측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이 북한에 대한 엄중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단체들이 “일본반동들까지 끌어들이어 반공화국빠라살포행위의 도수를 높이면서 동족을 반대하는 심리전책동에 끈질기게 매여달리고 있다.”

민주조선, 국가인권위원회내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구성 비난(11.28)

- <위협수위를 넘어서 《인권》모략소동> 제하에, 국가인권위원회내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국제협력을 강조한 점을 비난

- “외세와 함께 이른바 《북인권문제》를 여론화하여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권위를 헐뜯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심히 자극하여 북남관계를 전면차단으로 몰아가려는 위험한 모략소동”
-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언급한 점을 주목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을 통해서 “《대화》니 뭐니 하는 것이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한갓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주장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보안법 근거로 남한 대북인권정책 비난(11.30, 12.1)

-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법률가학회가 “이미 력사의 쓰레기 속에 묻혔어야 할 구시대의 파썸악법을 더욱 부동켜 안고 그 것을 6.15 통일시대를 뒤집어엮고 《집권안보》를 위한 만능의 도구로 휘두르는” 남측의 태도를 “반민족, 반통일, 반인권적범죄행위로 낙인 하면서 이를 공화국 전체 법률가들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고 보도(11.30)
 - 로동신문은 《보안법》에 의한 남한의 인권침해실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 및 유엔총회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고 비난(12.1)

민주조선, 남한 북한인권법안 비난(12.13)

- <남잡이가 제잡이 된다> 제하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법안이라고 비난
 - “한나라당이 채택하려고 하는 북인권관련법안들로 말하면 미국이 반공화국압살의 목적으로 만들어낸 ‘북조선인권법’을 모방해 거기에 반통일적인 독소조항들을 더 첨부한 모략적인 법안”이라고 주장
 - 통일 후 인권침해자 처벌을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명문화한 대목에 대해 “통일은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여 하나가 되는 일”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북한인권대사 설치에 대해서도 “동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비난
 - 대북전단지 살포 지원과 대북방송 원상복귀 조항과 관련, “한나라당이 반공화국 뼈라살포행위의 공범자이고 대결에 환장한 집단이라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다”고 주장. 또한 “이런 동족대결의 악법이 만들어질 경우 북남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임.

로동신문, 남한 북한인권법안 비난(12.18)

- <전면대결을 추구하는 반역당> 제하에, 한나라당의 ‘북인권관련법안’ 제안은 “반북 뼈라살포행위를 비호두둔하며 당국의 재정적 지원을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흡수통일 야망실현을 위한 반북대결악법”이라고 중단 촉구
 - 한나라당 대표가 “극우보수단체들의 뼈라살포행위를 터무니없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그 무슨 《애국충정》으로 추어주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비난
 - 참여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남한 단체들이 “《한나라당》이 제안한 《북인권 관련법안》을 《반북활동지원법》으로 락인하면서 그 조작책동을 당장 걷어치울 것을 강력히 주장” 하였다고 보도

로동신문, 남한을 인권유린 집단으로 비판(12.20)

- <파썬광의 살기어린 인권탄압소동> 제하, 민노총 이석행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혐의로 체포한데 이어 서울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고 보도하면서, “합법적인 로동 운동에 대한 무지막지한 탄압이며 초보적인 생존권과 민주주의마저 짓밟는 극악한 인권유린행위” 라고 비난
 - 북한의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

로동신문, 남한 북한인권문제제기 비난(12.21)

- <부당한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단죄> 제하에, 남측 민주노동당, 범민련남측본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진보연대 등 단체들이 대북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대해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초불 투쟁에 나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권유린 행위를 감행하고 ... 《결의안》에 진실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보도
 - <반통일적 리병박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남측 각계계층이 정부의 반통일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유엔을 무대로 벌리는 그 무슨 《북인권결의안》 놀음에 주모자로 가담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모략책동에 날뛰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북인권법》을 조작하려고 획책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공조》를 떠들며 《북인권재단설립》이니 뭐니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언급

로동신문, 보안법 인권침해 비난(11.10)

- <《보안법》을 휘두르는것은 무덤으로 가는 길>라는 논평을 통해, 보안법으로 인한 남한 내 인권침해 사례를 비난
 - “남조선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도 목요집회를 가지고 《보안법》이 가장 기본적인 량심과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남아 인민들에게 고통을 주고있으며 현 《정부》하에서 《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행위와 량심수가 더욱 늘어나고있다고 주장하면서 악법철폐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5. 분석 및 평가

미국 및 일본의 인권침해 사례 부각

- 미국 및 일본 내부의 인권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권문제를 논의할 자격이 없는 국가들이 북한인권문제를 정치적 의도로 제기한다고 비판함.
 - 우리식 사회주의 하에서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제전복을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기존 논리 반복
 - 미국이 반테러전을 명분으로 한 해외주둔군 배치 등을 개별국에 대한 자주권 침해로 규정함.
 - 일본에 대해서는 일제하에 강제징용, 군위안부, 민간인 학살, 생체실험 등 인권 침해에 대한 사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여 인권문제를 논의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함.
 - 또한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자격을 강하게 비난함.

한국 내 북한인권 동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 정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통일연구원) 등 북한인권 활동 강화,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논의 등을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인권논의의 종단을 촉구함.

-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 공동발의국 및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남북관계 중단을 경고
-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이 한·미 정상회담 등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 제기
- 6.25 전쟁 납북자문제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난
- 촛불시위, 종교차별, 국가보안법 등으로 한국 공권력이 인권침해를 했다고 거론하면서, 남한당국도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

인도주의 사안



1. 탈북자	45
2. 납북자·국군포로	54
3. 이산가족	60
4. 분석 및 평가	64

1. 탈북자

진영 의원, 국내입국 탈북자 주민번호 변경 허용 추진(7.6)

- 진영의원(한나라당)은 하나원을 거주지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국내입국 탈북자들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힘.
 - 중국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보고 북한이탈주민들을 식별해 입국 거부조치를 취하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동일한 인근 경기도, 인천지역 주민 49만여 명의 중국 입국까지도 거부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미국 상원의원 7명, 중국에 '탈북자 복송중단' 서한(7.14)

- 샘 브라운백, 바버라 박서 의원을 비롯한 미 연방 상원의원 7명은 후진타오 중국 주석에게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냄.
 - 탈북자가 복송되면 사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 일원으로 탈북자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권고
 - 중국이 탈북자들에게 유엔 고등난민판무관실(UHCR)과 탈북자를 도우려는 인도주의 기구들에 대한 접촉을 허용할 것을 요구

미국 부시 대통령, 탈북자 면담시 탈북자지원관련 중국과 협력의사 표명(7.24)

- 부시 대통령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조진혜)를 만나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힘.

중국, 올림픽 기간 북-중 접경 교량 폐쇄(7.21)

- 중국은 올림픽 기간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의 접경 교량을 모두 폐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접경 교량 폐쇄 이유는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보안 조치의 일환

UNHCR 보호 탈북자 5명, 미국행을 위해 체코 입국(7.27)

- RFA는 탈북자 5명(남성 3명과 여성 2명)이 북송될 위험에 처해 있다가, UNHCR의 긴급지원 요청을 받은 체코 정부가 '일시 체류'를 허용함에 따라 중국에서 비행기편으로 7월 27일 프라하에 도착하였다고 보도(7.30)
 - 체코 정부가 중국 내 탈북자들에게 제3국 망명을 위한 '일시 체류'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체코내무부에 따르면, 이들 중 남성 1명이 먼저 미국 입국허가를 받아 입국(8.20)
 - 나머지 4명도 미국 입국허가를 받아 미국 입국(11.26)

국가인권위원회,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노력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권고(8.5)

-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국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 할 것을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권고함.
 -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미국국제종교위원회 등 국내외 많은 기구들은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그 실태에 대해서도 매년 수천 명, 월평균 수백 명 수준으로 강제 송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인권위원회가 지적함.

미국 망명 탈북자, 중국 강제북송 항의 단식 시위(8.6)

- 베이징 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보호를 받다가 3월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조진혜)가 8월 2일부터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단식 시위

시민사회단체들, '비보호' 탈북자 보호정책 개정 요청(8.7)

- 라이트코리아와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북한방송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는 현재의 탈북자 보호정책을 개정하라"고 촉구함.
 - 노무현 정권 당시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4항에는 '중국 등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해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탈북자들 중 일부는 중국에서 10년 이상 체류했다는 이유로 '비보호대상'으로 분류돼 정착 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기독교사회책임, “미국망명 탈북자 단식에 동조농성”(8.9)

- 기독교사회책임이 미국에 망명한 탈북자(조진혜)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을 촉구하며 벌이는 단식 농성을 격려하기 위해 동조 농성 참여의사 표명
 - “탈북자 5-6명으로 구성된 ‘단식 동참단’을 워싱턴에 파견해 베이징올림픽 기간에 동조 농성을 벌이고 국내에서도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할 계획”

재일 탈북여성 3명, 조총련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할 방침(8.12)

-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 거주 탈북 여성 3명이 거짓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건너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과거 북송사업을 지원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상대로 오사카와 도쿄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힘.
 - 탈북여성들이 조총련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은 지난 6월 오사카 지방 재판소에 제소한 것에 이어 두 번째임.

한·미·일 국회의원 131명, 중국 탈북자 구출 서명 운동(8.21)

- ‘탈북자구출운동가 석방추진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일본 참의원국과 중의원 의원을 포함해 27명이, 7월에는 미국 상하원의 국회의원 54명이, 그리고 8월 18일에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59명이 국적과 정파를 초월해 탈북자 석방운동에 참여함.
 - 국회의원들은 중국정부에 발송한 서한에서 탈북자들은 정치성을 떠나 국제사회가 보호해주어야 할 사람들이고, 이들을 체포해 형벌에 처하는 것은 인도주의 정신과 UN난민협약 정신에도 위배되는 일이라며 체포된 한국국적 탈북자들의 석방을 촉구

기독교 인권단체, 후진타오 중국 주석에 강제복송 중단 촉구(8.25)

- 기독교사회책임을 비롯한 50여개 북한 인권단체들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탈북난민 강제복송 중지촉구 집회를 갖고 방한 중인 후진타오 중국 주석에게 공개서한을 보냄.
 - “중국 정부는 그동안 외국 대사관에서 망명신청을 하는 탈북자들을 안전하게 떠나도록 조치해줬다”며 사의를 표하고 “하지만 지금도 중국에는 매주 150-300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

- 중국 정부에게 탈북자들의 강제복송 중지와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와 성노예화 방지, 중국에 감금돼 북한인권운동가들의 조속한 석방과 감옥 내에서의 비인도적 처사 중지 요청

호주, 탈북자 2가구에 ‘망명’ 인정(8.23)

- RFA는 호주 정부가 탈북자 두 가구에 난민 지위를 주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정치적 망명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함.
 - 호주정부는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할 경우 탈북자들이 호주로 쇄도할 가능성 등의 이유 때문에 난민 지위 부여에 매우 신중하지만,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호주에 입국하는 탈북자를 추방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제3국 위장망명 탈북자 형사처벌 추진(8.26)

- 정부는 국내에 정착해 각종 지원 혜택을 받고나서, 미국 및 영국 등 제3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자에 대해 정착금 감액 및 형사처벌을 추진하기로 함.
 - 통일부는 “정부는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민임을 속이고 제3국에 다시 위장 망명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정착지원금을 감액 조치하고, 행정적 제재를 취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

올림픽 이후 태국 진입 탈북자 증가(8.27)

- RFA는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거의 없던 탈북자들이 폐막식이 있었던 24일에 12명이, 26일에는 3명이 태국 이민국 본부 수용소로 들어왔으며, 태국 북부 메사이 이민국에서도 며칠 사이 10여 명의 탈북자들이 체포돼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힘.
 - 올림픽 기간에 중국 공안 당국의 외국인에 대한 검문검색이 강화되었으며, 장마철 태국 진입 루트인 메콩강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태국진입자 감소

기독교사회책임, 중국 탈북난민 복송중단 촉구 시위(9.3)

- 기독교사회책임은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난민 강제복송 중단을 호소하는 집회를 통해 중국 정부에게 “탈북자들이 원하는 나라로 갈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호소

- 중국인들의 탈북여성 인신매매 방지, 탈북자들을 돕다 감금된 북한인권 운동가들의 조속한 석방과 감옥 내 비인도적 처우 금지 등을 촉구

중국 지방정부, 중국인 남성과 결혼한 탈북여성 2명에게 임시 영주권 발급(9.3)

- 국제교육증진 기금의 창립자인 케이트 조우 미국 하와이 대학 교수가 RFA에서 “랴오닝성 환린(桓仁) 지방정부가 지난해 2명의 탈북여성에게 임시 영주권을 발급했다”고 언급
 - 조우 교수는 “우리가 탈북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사업을 하게 해 주면, 한국과 미국의 사업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랴오닝성 지방정부를 설득해 임시 영주권 발급을 동의했다”고 전함.
 -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탈북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합법적 체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탈북자들이 많이 사는 북한과 인접한 동북 3성의 지방 정부들과 수 년 동안 협상해 왔다”고 밝힘.

베이징 UNHCR, “2008년 10월부터 탈북자 보호 재개”(9.3)

- VOA가 중국 베이징 주재 UNHCR이 “장애인 올림픽이 끝나고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탈북자에 대한 보호를 재개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유엔이 탈북자에 대한 보호를 재개하려고 해도, 중국 정부의 태도가 변수로 남아 있다”면서 “보호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그 규모는 과거 보다 확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
 - 베이징 UNHCR은 매우 제한적으로 탈북자의 제3국행을 주선해왔으나 2007년 7월 이후 신규 보호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 “탈북자에 임시영주권 부여 중국 협력” 건의(9.16)

- 아시아·태평양 협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선 중국에서 결혼해 가정을 이뤄 살고 있는 탈북여성들에게 임시 영주권을 발부하도록 중국 측과 협력한다면 탈북자들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밝힘.
 - 2007년 7월 중국 랴오닝성 환린 지방정부가 2명의 탈북여성에게 임시영주권을 발부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진 점을 언급
 - 2006년 중국 방문 조사결과를 원용, 탈북 여성 가운데 조선족 또는 중국인과 결혼한 여성이 지린성의 경우에만 최소 1만 5천명에 달했으며 이중 80% 정도가

결혼 후 자녀를 두고 있었다고 주장

중국 정부, 탈북여성 5명 복송(9.20)

- 중국 도시시보(都市時報)는 윈난성 국경 경비 등을 담당하는 변방총대가 지난 4월 21일 옌벤(延邊) 조선족 자치주와 랴오닝성 선양(瀋陽)에서 기차를 타고 윈난성 쿤밍(昆明)으로 온 탈북여성 5명을 체포하여 강제복송하였다고 보도함.
 - 탈북여성들은 쿤밍에서 태국과의 접경지역인 징홍(景洪)으로 가는 기차를 타려다가 검거됐으며, 이들을 안내했던 조선족(김모)은 밀입국 알선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 중으로 당국자는 조선족이 “돈벌이를 위해 이 일을 벌였다”고 전함.

‘2008 북한 인권 국민 캠페인’, 국내외 탈북 고아 - 무국적 아동의 실상 동영상 공개(9.26)

- 2008 북한인권국민캠페인은 자체 입수한 동영상을 통해 국내외 탈북고아 - 무국적 아동들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 사태가 빚어낸 현상으로 최대 1만 7000명 교육, 의료 사각지대에서도 놓여 있다고 공개.
 - “탈북 고아와 무국적 아동은 대부분 경제사정이 어렵고 합법적인 신분 획득이 힘들어 공교육에서 배제되고 있고 의료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태국, “탈북자 난민수용소 협의” 관련 입장 표명(10.2)

- 태국 정부는 외무부 대변인(보라뎃 비라바킨)이 성명을 통해 “태국 내 탈북자 난민 수용소 설치에 대해 (한국 측과) 어떤 합의나 협력을 한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태국입국 탈북자는 불법입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힘.
 - 태국 현행법상 불법입국자는 2-6천 바트(약 6-18만원)의 벌금을 물거나 그 벌금 액수에 해당하는 기일(10-30일)만큼 구류처분을 받은 뒤 추방절차를 밟게 됨.
 - 국제조약상 불법입국자는 본국 송환이 원칙이나 태국 정부는 탈북자를 복송하지 않고 한국행이나 미국행을 묵인해왔음.

러시아, 중국 경유 입국 탈북자 첫 난민 인정(10.3)

- 러 일간지 ‘노동’은 2003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중국에 체류하던 탈북여성이 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한국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난민으로 인정받았다고 보도(10.13)

- 중국 체류 탈북자가 러시아 국경을 넘어 난민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임.
- 2007년 10월 중-러 국경 가운데 수심이 얇은 그라니트나야 강을 건너, 러시아 우수리스크의 한인 교회에 잠입
- 러시아 당국의 추적으로 체포되어, 러시아 법원으로 넘겼지만, 한인 교회가 한국 영사관과 UNHCR에 구명을 요청하자 징역 3개월 이후 풀려남.
- 현지 언론들은 “백 씨 사건을 좌시할 경우 러시아가 탈북자들의 국적 세탁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북-러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며, 한국영사관과 선교단체에 대해서도 “러시아 실정법을 무시하고 이민국 관리들을 위협했다”고 정부의 강한 대응을 촉구함.

캐나다, 탈북자 4명에 동시 난민지위 첫 인정(10.24)

- RFA는 캐나다의 이민 난민국 대변인(스테판 메일파트)이 “올 들어 처음으로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에 탈북자 4명이 캐나다의 난민지위를 받는 심사를 통과해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
 - 대변인은 “난민 인정 신청서를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가 134명”이라고 밝힘.
 - 2008년 캐나다의 이민 난민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탈북자 사례는 모두 25건으로 캐나다 이민국은 이 중 19건을 난민 인정 4건, 거부 1건, 중도 포기·난민 신청 철회 14건으로 처리

몽골의원, 몽골 입국 탈북자 한해 700명 모두 3국행(10.25)

- RFA는 몽골 램자브 군달라이 의원의 말을 인용, 중국 등을 거쳐 몽골에 입국하는 탈북자가 한해 평균 700명에 이르며 몽골 정부는 이들을 모두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제3국으로 보내고 있다고 밝힘.
 -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이하 국제의원연맹)’의 공동 의장으로 연맹 총회 참석을 위해 방한한 군달라이 의원은 몽골 입국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 부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몽골은 국제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함.
 - 군달라이 의원은 몽골내 탈북자를 위한 난민촌 건립 문제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필요치 않다”면서 “북한 난민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고, 또 지금도 잘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탈북단체 “탈북자 신속한 한국행 보장” 촉구(11.21)

- 북한민주화위원회, 탈북인단체총연합 등으로 구성된 15개 탈북자인권단체들이 외교 통상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및 제3국의 한국공관에 대기 중인 탈북자 적체 문제 해결을 촉구함.

NED, 한국단체 전단지원 요청 거부(11.21)

- RFA는 전 세계 민주화운동 단체를 지원하는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이 한국 단체들로부터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를 위한 지원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함.
 - NED 관계자는 “실제 뼈라를 잃거나 보유한 북한 주민들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이와 관련, 현재 가장 활발하게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남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NED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함.

탈북자 일가족 4명, 제3국 한국대사관 진입(11.22)

- 중국 정부의 단속으로 쫓겨 다니던 탈북자 일가족 4명이 지난주 동남아 한국대사관에 머물고 있다고 탈북자 지원단체가 밝힘.
 - VOA를 통해 “지난 6월 탈북한 허 모씨 가족 4명이 중국을 떠나 동남아 한 국가에 도착해 지난 22일 한국대사관에 안전하게 인계했다”고 말함(11.27).

2002-2006년 북한인 1천 442명 EU 시민권 취득(12.12)

- 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지난 2002-2006년 5년간 북한인 1천 442명이 유럽연합(EU) 회원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됨.
 - 대부분 난민 신분의 탈북자로 추정되지만 조선족도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
 - 독일 518명, 프랑스 492명, 스페인 302명, 영국 35명, 덴마크 32명, 아일랜드 20명,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각 15명, 불가리아 11명,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2명의 북한인이 시민권을 취득함.
 - 국가, 연도에 따라 유로스타트에 자료가 누락된 경우도 있어 이를 감안할 경우 실제 2002-2006년에 새롭게 EU 회원국 시민권을 취득한 북한인은 이보다 더 많아 보임.

탈북 여성 1명 라오스 수용소서 사망(12.18)

- 탈북 후 한국행을 시도하다 라오스에서 체포된 여성(김경희, 27)이 현지 수용소에서 숨졌으며, 함께 붙잡힌 탈북자 2명은 중국으로 강제송환될 위기에 처했다고 동남아 일대에서 탈북자 지원활동가(김희태 전도사)가 주장함.
 - “라오스 국경지역인 보텐의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탈북 여성이 지난 14일 갑자기 각혈하면서 사망” 한 것으로 주장
 - 다른 탈북자 부부 2명과 함께 보텐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되었으며, 수용소측은 13일 이들에게 “15일까지 벌금 2천 500달러를 내지 않으면 중국으로 강제송환 하겠다”는 방침을 통보
 - “나머지 탈북자 부부도 강제송환 돼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받게 될 처벌과 고초를 두려워해 14, 15일째 쇠붙이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배가 너무 아파 고통을 호소하다가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고 설명함.

탈북자 19명, 미얀마서 체포돼 재판예정(12.20)

- RFA에 따르면, 한국으로 오려던 탈북자 19명이 미얀마에서 체포돼 불법입국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함.
 - 탈북자들은 지난 2일 중국에서 쾌속 보트로 메콩강을 타고 내려와 태국 진입을 시도했지만 삼엄한 검문으로 인해 진입에 실패하자 태국, 라오스, 미얀마의 국경 지역 강가에 내렸다가 미얀마 이민국에 체포됨.
 - 65세 가량의 노인과 10세 미만의 어린이, 남성 4명 등 포함
 - 이들 중 아동 2명(6세, 15세)의 어머니가 이미 한국에 입국, 자녀들의 구명촉구
 - “미얀마 정부의 배려로 12월 30일 오후 미얀마의 짜잉퉁(Kyaingtong)을 떠나 밤 10시 30분(한국시각 31일 0시30분)쯤 태국 북부의 타칠렉(Tachilek) 지역 국경을 넘은 뒤 31일 낮 태국의 한 경찰서에 자진 출석”

박선영·김충환 의원, ‘탈북자 실태조사’ 라오스 방문(12.24)

-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탈북자 실태조사(3박 5일)를 목적으로 라오스와 태국을 방문하기 위해 26일 출국
 - 라오스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탈북자들을 만나 탈북 경위를 듣고 구조 방안을 모색할 계획
 - “실태조사는 외통위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이회창 총재가 지난 21일 초당적 협력방안의 하나로 제안” 한 것임.

메콩강서 배 전복돼 탈북 여성 2명 실종(12.27)

- RFA에 따르면, 중국에서 배를 이용해 태국으로 가던 탈북자 6명이 탄 배가 전복돼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짐.
 - 지난 5일 탈북자 25명이 4척의 배에 타고 메콩강에서 태국으로 들어가던 중 탈북자 6명이 탄 배가 뒤집어 4명은 구조됐으나 23살과 48살 여성 2명 실종
 - 동절기 몽골 북부지역을 이용할 수 없어 탈북자들의 태국유입 급증

외교부, 탈북자 영문표기 'Refugee' 통일(12.28)

- 외교통상부가 그동안 여러 용어가 병용돼 왔던 탈북자의 영문표기를 '난민'이라는 뜻의 'North Korean Refugee'로 통일
 - 외교 당국자는 "탈북자의 영문표기에 대해 그동안에도 난민이 가장 많이 쓰이기는 했지만 이와 함께 망명자(Defector)와 피난처를 찾는 사람(Asylum seeker) 등이 혼용돼왔다"면서 "최근 외국 정부에 관련 서한을 보내기 위해 검토한 결과, '난민'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외교부는 '난민'이라는 용어가 정치적, 경제적 사유로 북한을 떠났으며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뜻이 내포돼 있다는 점에서 주로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되는 '망명자'나 일반적인 표현인 '피난처를 찾는 사람'이라는 용어보다 적합하다고 결론

북한 일가족 4명 해상 탈북(12.30)

- 북한 일가족 4명이 오후 10시경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동쪽 13.4km 해상에서 2t급 목선에 탄 채 탈북하여 해군에 발견
 - 30일 오후 7시경 황해도 해주시에서 목선을 타고 출발해 3시간여 만에 한국 수역진입

2. 납북자·국군포로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납북자가족 피해위로금 지급 의결(7.1)

- 제7차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는 납북자 가족에게 피해위로금 7억 9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7.27)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

국방부, 귀환 국군포로 정착지원체계 마련 추진(8.6)

- 국방부는 귀환 국군포로 또는 국군포로 가족들을 위한 금융상담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등 정착지원체계 마련 추진
 -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법인 결성, 금융상담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센터 건립, 사회적응 프로그램 제공, 민관 협력 정착지원체계 구축 등

북-일 선양에서 납북자문제 논의(8.6)

- 북한과 일본은 8월 11-12일 선양에서 실무자급 회의를 열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발표
 - 북한은 7월 회담에서 1970-1980년대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재조사를 약속했으며 일본은 북한이 최대한 빨리 조사에 착수해 세부사항을 매듭짓기를 희망

미국, 일본인 납치 문제도 북한 테러명단 제외시 고려 시사(8.7)

- 국무부 부대변인(곤잘로 껀리고스)은 북한이 일본과 납치자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방안을 들고 나오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명백하게 “납치문제 해결책이 테러명단제외 판단에 포함된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함.

일본, “납치문제 재조사위원회” 구성 계획(8.14)

- 교도통신은 일본이 올 가을까지 완료하기로 한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재조사 실시 주체가 되는 조사위원회를 8월 중으로 구성하기 위해 북측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보도
 - 양국은 중국 선양에서 열린 국교정상화 실무회의(11-12일)를 통해 ‘권한이 주어진 북한의 조사위원회가 신속히 행동에 착수해 가능한 한 가을까지 재조사를 완료한다’는데 합의

- 대신 2006년 이후 북한을 상대로 부과했던 제재들의 일부를 해제하기로 합의
- 조사 대상에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일본인 납치자 17명 중 이미 귀국한 5명을 제외한 12명 이외에도, 민간단체인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가 납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36명이 포함

일본 외무장관, 중국에 납북자 재조사 협력요청(8.16)

- 고무라 마사히코 일본 외무장관, 중국 방문에서 최근 북한과 지난 1970-1980년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도록 중국 측이 북한에 대해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일본 관리들이 밝힘.

후쿠다, 납치담당상의 방북 가능성 언급(8.18)

-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나카야마 교코 납치문제담당상의 방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6.25 한국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납북자 문제 동영상 공개(8.19)

-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UCC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
 - “무엇보다 전시 납북자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조차 여론화하기 어렵고 목격자들이 나이가 들어 하나 둘 세상을 뜨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UCC를 만들게 됐다”고 밝힘.

한나라당, “남북대화 재개시 국군포로·납북자 우선 제기” (8.28)

- 한나라당은 의원 연찬회에서 남북대화 재개시 국군포로·납북자문제를 우선 제기할 것임을 밝히고 “다만 북한체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북한의 전향적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할 것이라는 입장 피력

납북자가족모임 회원,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조기송환 및 생사확인 촉구(9.2)

- 가족모임은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비전향 장기수는 돌아갔는데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아픔은 그대로”라며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 촉구

대북인권단체들, '김동식 목사 납북사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9.19)

-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다가 납북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부인과 대북인권단체들은 김 목사의 생사 확인과 유해 송환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권고토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 기독교사회책임과 북한인권국제연대, 기독교북한인연합 등 17개 대북 인권단체가 '김동식 목사 유해송환운동본부' 구성
 - "김 목사는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가가 생사 확인을 포함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정부의 자국민 보호 소홀을 지적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김 목사의 생사 확인과 유해 송환에 나설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

박선영 의원, "15년간 국군포로 74명 탈북" (9.27)

- 박선영 의원이 통일부에서 입수한 '국군포로 탈북 귀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94-2008년 탈북해 귀환한 국군포로는 모두 74명이었다고 밝힘.
 - 연도별로는 1990년대에는 연간 1-4명에 그쳤으나 2000년 9명, 2004년 14명, 2005년 11명, 2006년 7명, 2007년 4명 등으로 2000년대 들어 크게 증가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지급 결정(9.30)

- 심의위원회는 피해위로금을 신청한 21건을 심의, 6억 4,100여 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힘.
 - 지급 신청 건에는 1966년 길용호 납북사건 어선원 4명의 가족들에 대한 피해위로금 포함
 - 선원 15명이 탑승했던 길용호는 1966년 1월 서해 격렬비열도 해상에서 괴선박에 납치됐으며 피랍 당시 '중공 괴선박에 끌려간다'는 무전 연락을 함에 따라 오랫동안 중국 측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추정됐었으나, 2001년 11월 귀환납북자의 증언을 통해 납북 정황이 파악
 - 2004년 10월 길용호 선원(서태봉)이 북한에서 남한 내 가족에게 안부편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8년 5월 납북자 31명 사진에서 길용호 선원 서태봉, 정복식 확인
 - 심의위원회 조사과정에서 1966년 당시 중국이 적십자사를 통해 길용호 납치를 부인했던 내용의 외교문서 발견

아소 총리, 납북자 가족 만나 정부 해결노력 약속(10.2)

-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재는 납북자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
 - 납치피해자 가족들을 총리 관저로 초대해 북한의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카야마 료코(中山恭子) 전 납치전담 장관이 총리의 자문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 일본 납치피해자가족회의 이즈카 시게오(飯塚繁雄) 대표는 납치피해문제의 조속한 처리와 모든 납북자의 귀국 추진 요청, 북한의 요청이 없을 경우 새로운 제재조치 고려 필요 촉구

납북자 동진호 선원 북한 수용소서 사망(10.13)

- 납북자가족모임은 “1987년 1월 서해 백령도 부근에서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던 동진 27호 선원(임국재)이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제25호 수성교화소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입수해 남측 가족에게 전달
 - 2003년 9월, 2004년 4월, 2005년 초 모두 세 차례 탈북을 시도했다가 발각돼 정치범수용소로 알려진 수성 교화소에 수감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지급 의결(10.30)

- 제10차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는 귀환 납북자 1명을 포함한 납북 피해자 18명에 대한 피해위로금 및 정착금 지급 건을 심의·의결
 - 총액 6억 9천 780만원의 납북 피해자 위로금 및 정착금 지급 결정

북한 고위관리, 일본인 납북자 가족상봉 가능 확인(11.9)

-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중 돗토리(鳥取)현 요나고(米子)시 출신의 마쓰모토 교코(松本京子·1977년 피랍 당시 29세)가 가족들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북한의 고위 관리가 밝힘.
 - 교코의 오빠(하지메)는 10월 특별실종자문제조사회의 주선으로 중국인 무역 관계자와 만나 교코가 일하고 있는 북한의 직장에 교코와 그녀의 남편, 또 다른 일본인 부부 등 모두 4명의 일본인 실종자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힘.

납북자단체, ‘납북자 명단’ 전단 대북살포 계획(10.22)

-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납북자 명단을 적은 전단지를 풍선에 실어 오는 27일 동해상에서 북한으로 대량 살포 예정
 -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용 대표는 “전단지 10만장을 어선 2척에 나눠 신고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을 출발, 해상에서 북한에 보낼 계획”이라며 “전단지에는 납북 어부 436명을 포함한 납북자 487명의 명단과 납북 일시, 장소 등을 적었다”고 밝힘.
 - 전단지에는 “1955-2000년까지 납치된 분이 500명입니다”, “6.25전쟁으로 포로가 된 분들도 아직 600명이 살아계십니다” 등의 내용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 거론
 - 전단지는 납북자와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포로의 생사 여부 등 소식을 중국을 통해 납북자가족모임에 알려주면 사례하겠다며 단체의 주소와 연락처도 밝힘.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 제출(10.23)

- 여야 의원 14명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서 “정부가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특별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
 -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재외공관에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조속한 송환, 북한 당국과의 대화, 귀환 국군포로·납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
 - 결의안 발의를 주도한 박선영 의원은 “송환 당사자와 가족들의 나이가 대부분 70세를 넘긴 지금,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며 “죽기 전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들의 품에 안기게 하자는 것은 인권의 문제이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

납북자가족 피해위로금 및 정착금 지급 의결(11.27)

- 제11차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는 14건을 심의하여 납북자 가족에게 피해 위로금 및 정착금 5억 8천 9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납북자 가족 지원법’ 추진(12.6)

-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생사확인이 안 된 전후 납북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개정안은 납북 피해자 가족에게도 귀환자의 정착금 지급수준을 토대로 피해 위로금

지급, 자립을 위한 장기저리대출, 주택우선분양 포함

KAL기 납북자 가족 송환운동 시작(12.11)

- 피랍탈북인권연대와 KAL기 납북자 가족들은 프레스센터에서 KAL기 납치사건에 관한 다큐시사회를 가짐으로서 1969년 북한에 의해 피랍된 KAL기 납북자들의 생사확인 및 송환운동 시작
 - 납북자 가족측은 “다큐시사회를 시작으로 40주년이 되는 내년부터 피랍된 가족들의 생사확인 및 송환운동을 대대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1969년 KAL기 납치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

국방부, 귀환 국군포로 대상 교육프로그램 마련(12.5)

- 국방부는 70대 후반의 귀환 국군포로 2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함.
 - 국방부는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560여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최근 귀환한 국군포로 2명을 대상으로 민간교육기관을 통해 시장경제와 자산관리, 생활법률, 심리치료 등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결정
 - 귀환 국군포로는 간단한 신문절차를 거친뒤 별도 사회적응교육 없이 가족친지 등과 함께 생활해왔음.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지급의결(12.16)

-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는 제12차 심의위원회에서 납북자 가족 14명에 대해 위로금 4억 1천 200만원을 지급 의결

3.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30% 사망(7.7)

- 통일부 산하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가 7일 공개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료 현황(해외 신청자 포함)’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12만 7251명 중 3만 5,47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

- 70세 이상 신청자까지 합하면 전체의 74.5%로 고령 이산가족들을 위한 이산가족 상봉 확대 시급

레나테 홍, 평양방문 가족 상봉(8.4)

- 독일인 레나테 홍(71)이 북한 유학생출신 남편 홍옥근(74·함흥 거주)씨와 47년 만에 평양 방문(7.25) 가족상봉
 - 독일 외무부와 국제적십자사의 도움으로 두 아들 페터(48), 우베(47) 등 가족 3명이 북한 조선적십자사의 초청 형식으로 방북

미국, 한인 이산상봉 보고서 작성(8.7)

- RFA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가 재미동포와 북한 가족 간 이산상봉을 돕기 위한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 예정
 -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지원법'에 따라 보고서 작성
 - 200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미국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지원 법안이 포함
 -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법안 발효 후 180일 이내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

정부, 이산가족 위로 행사 개최(8.19-29)

- 대한적십자사, 통일부, 이북5도위원회 등 3개 기관 공동주최로 '8·15 계기 이산가족 초청행사' 개최
 - 서울, 인천, 경기지역 이산가족 200명을 대상으로, 19일(부산)부터 29일(제주)간 7개 지방을 순회하면서 해당지역의 이산가족들을 초청, 위로행사를 개최

대한적십자사, 추석맞이 이산가족 위문행사(9.8)

- 대한적십자사는 추석을 맞아 전국 14개 시·도에서 9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위문행사를 개최

통일부 차관, “북한과 ‘이산가족’ 문제 최우선 협의할 것” 강조(9.14)

-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추석을 맞아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실향민 합동경모제에 참석, 실향민들을 위로함.
 - 홍 차관은 경모제 격려사를 통해 “이미 60년을 기다려온 이산가족들에게 더 이상의 기다림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다른 어떤 무엇보다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 간에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남북간 대화가 열리면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말함.

이산상봉 신청자 2008년 2,184명 사망(10.5)

- 통일부에 따르면 1988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모두 12만 7,321명으로 이 중 27.9%인 3만 5,484명이 사망했고, 올해에는 1-9월에 2,184명이 사망
 - 전체 신청자 4명 중 3명은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나타남. 연령대별로 90세 이상이 3.9%, 80-89세 30.2%, 70-79세 40.4% 등 70세 이상이 전체 신청자의 74.5%를 차지했고, 60-69세와 59세 이하는 각각 16.1%와 9.4%임.
 - 이산가족들의 상시 상봉을 위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지난 7월 12일 완공됐지만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면회소 관계자들이 모두 철수한 상태임. 정부도 면회소 내부 장비·비품 구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41억원을 책정했지만 집행은 보류중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이산가족문제’ 국제사회 동참 촉구(10.21)

-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 이상철)는 ‘제27회 이산가족의 날’을 맞아 국제사회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 동참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 정부에게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사용 이벤트성 상봉행사를 지양하고 국제 적십자사 심인사업 방식(사람을 찾는 사업 방식, 생사확인 → 서신교환 → 상봉 → 재결합 순)으로 전환해 이산가족 생사와 거처 확인, 자유로운 서신 교환에 주력해 줄 것”을 촉구
 - 80세 이산 고령 이산가족들의 고향 방문 허용 요구
 - 위원회는 정부와 협력해 인권고등판무관실과 인권위원회 등 국제연합의 인권 기구를 상대로 세계인권선언과 인도주의 관련 국제법에 의거해 이산가족 문제를

적극 제기할 계획

- 일천만 이산가족위원회 뉴욕방문단이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뉴욕 한미자유수호 운동본부, 6.25 참전 국가유공자회 회원들과 함께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국군 포로송환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임(11.10).

북한적십자회, “남북 직통전화 단절” (11.12)

-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부를 폐쇄하고 남북 직통전화도 단절하겠다는 의사 천명
 - “남측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주도한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북한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엄중한 도발이며 6.15와 10.4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비난
 - 또한 남북관계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경고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동족 대결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부득불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주장

통일부차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협력 촉구(10.21)

-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제27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 참석, 남북관계가 새조정기를 겪으면서 2007년 합의했던 이산가족 상봉행사 중단 상황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정부가 남북대화 재개시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표명
 - “이산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게 조속하고 조건 없는 협력 촉구

이산가족 80세 이상 고령자 3만 명(10.23)

-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현황’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을 제기
 - 1999년 이후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자는 모두 12만 7,321명이며, 2008년 9월 현재 3만 5,484명 사망 집계
 - 현재 상봉 신청자 중에서 생존자는 모두 9만 1,837명이며, 이 중 90세 이상이 3,604명, 80-89세 2만 7,732명으로 80세 이상 고령자가 3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

통일부 차관 이산가족문제 해결위한 북한 협력 촉구(12.16)

-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 이상철)가 이북5도청에서 주최한 ‘이산가족 재결합 기원 및 유엔방문 보고회’에 참석, “정부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산가족 문제는 순수 인도적 사안인 만큼 북한은 이산가족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는 데 하루 빨리, 그리고 조건 없이 협력해야 한다”고 재촉구함.

4. 분석 및 평가

탈북자 국내입국 및 해외 정착 지속적 증가

- 중국 베이징올림픽 개최로 국경경비 및 단속이 강화되어 탈북자의 이동이 일시적으로 제약을 받았으나, 태국, 동남아 국가 등을 경유한 국내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중국 내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인접국을 통한 국내입국 지속
 - 태국 이외 미얀마, 라오스 등에서 탈북자 불법입국 사태 발생
 - 제3국 보호시설에서 탈북자 사망 사건 및 강제송환을 우려한 자살 시도 발생
- 미국 북한인권법 실행에 따라 미국입국허가를 받고 난민지위로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사례 지속
 - 태국, 러시아, 체코 등에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등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 입국
 - 호주 및 유럽연합국가에 정치적 망명 등 유사한 지위를 받아 정착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나, 집단입국 가능성을 우려하여 난민지위 제한적 부여

한국적 취득 탈북자 해외망명신청대책 제도화

- 영국정부의 공식요청에 따라 한국적 취득 탈북자 지문 확인 협력이 이루어짐에 따라 위장 망명 사태에 대한 대책이 본격화
 - 정부는 해외 위장 망명신청자에 대한 정착지원비 삭감 및 형사처벌 조치 검토
 - 망명절차 진행 중 자발적 귀환 사례 증가

납북피해자 보상·지원 본격화 및 납북피해사건 추가 발견

-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납북자 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귀환납북자에 대한 정착금·주거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짐.
 - 신청자에 대한 사건조사과정에서 길용호 등 새로운 납북사건이 추가로 인정

납북자 가족단체 대북전단 사업 쟁점화

-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납북자들의 명단을 수록한 전단지를 북한에 보내는 사업을 추진
 - 북한당국이 남북관계 중단의 근거로 비난

이산가족상봉 중단 장기화 및 해결방식 전환 촉구

-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산가족상봉사업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산가족단체들이 남북간 상봉행사 이외에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 전환을 촉구
 - 고령이산가족들의 상황을 고려, 북한에 대해 조속하고 조건 없는 상봉재개 및 고향방문 촉구
 -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이북5도위원회가 공동으로 고령이산가족들을 초청 위로 행사 개최
 - 독일 레나테 흥 가족은 북한적십자사의 초청으로 방북하여 가족상봉 실현



제3권 2호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NORTH KOREAN HUMAN RIGHTS